

공 개



의안번호	제 302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9. 8. (제 16 차)

의  
결  
사  
항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9. 8.

## 1. 의결주문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과소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이 적발되어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2,422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2항
- 舊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제1항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9차(2021.5.27.)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라. 2021년도 제16차 금융위 안전소위('21.9.3.) 심의필

마. 특이사항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중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은 추후 안전 상정 예정

<별지>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교보생명보험(주)

- 과징금 2,422백만원 부과

## 2. 조치사유

###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주)는 2001.6.7.~2002.12.30.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2007.10.2.부터 연금전환이 신청되어 생존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공시이율은 직전 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 시장금리, 장래예상수익률,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이하 '신공시이율 I') 하며,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신공시이율 II~IX\* 및 제5회~제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액 등을 계산

함으로써

\* 회사는 현재 매월 9종의 공시이율(신공시이율 I ~ IX)을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음

2015.12.11.~2020.11.13. 기간 중 지급사유가 도래한 총 669건의 연금 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381백만원) 보다 190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주)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기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6.1.6.~2020.6.23.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연금저축교보 First연금보험’ 등 391건(수입보험료 8,387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391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 교보생명보험(주)는 2016.2.25.~2020.7.23.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더든든한 무배당 교보통합CI보험' 등 28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관계 법규

### I. 보험업 관련 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삭제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② 삭제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④~⑥ (생략)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 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③ (생략)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 10.~11.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



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구)보험업법」(2017.4.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0.~11.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 2.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④ (생략)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II. 제재 관련 법규 등

###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2. (생 략)
  3. 문책 경고
    -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다. (생 략)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바. (생 략)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전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생 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생 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생략)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 회사 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용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 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 나.~다. 삭 제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삭 제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3) 삭 제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7) 삭 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3) (생 략)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7) 삭 제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마. 기타

(1)~(6) (생략)

바. 삭제

##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구)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1. (생략)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생략)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나. 삭 제

다. (생 략)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삭 제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생 략)
- (2)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 (6) 위반자의 소속 임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한다)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7)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3) (생략)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7) (생략)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다. (생략)

#### 라.~마. 삭제

##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 2015.7.1.시행)

###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5.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계 조정)

구분	고의	과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li> <li>-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li> <li>-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li> <li>-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li> <li>-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li> <li>-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ul>
보통의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중대,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li> </ul>
경미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li> <li>-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li> <li>-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li> </ul>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2) (생략)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다. (생략)

##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1.~3. 삭제

③~④ (생략)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3. (생략)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 정한 보호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Ⅲ. 회사 내규 등

#### 1. 회사의 기초서류(약관 및 사업방법서)

##### □ 회사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 의거하여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해약환급금) (1)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별표1)

연금지급 기준표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생존 연금	종신 연금 형	개인 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 (10년 보증지급) - 정액형 - 체증형(5%,10%,15%체증)

중 략

생존 연금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10년,15년,20년,75세,80 세,85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전년도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단,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주) 1. 적립액(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최저한도 연복리 3.0%)
3. 연금을 매월, 2개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4~7. 생략
8.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직전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  
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 시장금리, 장래 예상수익률,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 □ 회사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사업방법서」 3. 적립계약의 부리이율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함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직전 6개월간 일반



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 시장금리, 장래예상수익률,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한다. (2)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상품((2)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회사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산출방법서」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남자, 여자)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되, 부부 연령차는 3세로 함

□ 회사 「더든든한 무배당 교보통합CI보험 약관」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 회사 '더든든한 무배당 교보통합CI보험' 외 42종의 약관 내용도 위와 동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생명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45	02-3145-7786